

전주, 음식도시로 러시아에 소개돼

미디어사 콥소물스카야 프라우다, 한국음식 취재 위해 방문... 다채로운 전주 음식 소개 예정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가 대한민국의 대표 음식도시로 러시아에 소개된다.

전주시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미디어사인 콥소물스카야 프라우다의 취재단이 29일과 30일 전주를 방문했다고 29일 밝혔다.

러시아 취재단은 첫날 전주시청을 방문해 박순종 부시장을 면담하고 전주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도약하게 될 수 있었던 계기와 음식문화

가 발달하게 된 계기 등에 대해 청취했다.

면담을 마친 러시아 취재단 일행은 전주한옥마을에서 한국문화의 정수를 직접 체험하고 한정식을 맛보았으며 전주 전통 비빔밥과 김치 만드는 방법, 막걸리, 풍나물국밥 등을 취재하는 등 전주의 음식뿐만 아니라 음식의 역사와 음식에 대한 문화까지도 취재했다.

이와 함께 취재단은 국제한식조리화

교를 방문,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전주가 미식도시로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식 전문인력 양상에도 매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30일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열리는 남부시장 야시장을 취재하는 등 1박 2일 전주 방문 일정을 보낼 예정이다.

시는 러시아 내 한류동호회만 개별 K-POP그룹 팬클럽을 제외하고도 약 95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만큼 러

시아에 전주 음식을 포함한 관광문화 자원이 소개되면 러시아 한류팬들의 전주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콥소물스카야 프라우다 방문단 관계자는 "한국음식은 영양과 맛, 아름다움까지 모두 겸비한 완벽한 음식"이라며 "특히 전주의 풍부한 재료와 문화유산, 역사까지 어우러진 전주음식이야말로 한국을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극찬했다. /채규남 기자

부천시 고위공무원,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시 벤치마킹

부천시 고위공무원들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우수사례 학습을 위해 전주를 찾았다.

전주시는 김만수 부천시장과 국·소·단장 등 부천시 고위공무원 35명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 추진 노하우와 관광활성화 방안을 배우기 위해 전주를 방문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천시 시장단의 이번 전주 방문은 지난 해 10월 유네스코 문화창의도시로 지정된 부천시가 선진도시를 방문해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추진됐다.

부천시 방문단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주시 홍보동영상 상영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전주시가 추진해온 사업들을 청취했다.

또 이들은 전당 내 구축된 전주음식 모형 전시실과 전주한식 자료실, 시루방, 홍보관 등 시설을 견학하고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와 국립무형유산원, 전주한옥마을 등을 찾아 관광활성화 방안도 모색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는 김만수 부천시장과 국·소·단장 등 부천시 고위공무원 35명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 추진 노하우와 관광활성화 방안을 배우기 위해 전주를 방문했다고 29일 밝혔다.

문무일 “공수처 도입 겹쳐서 수용하겠다”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해야...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꼭 유지돼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도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제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국가경찰이 수행할 범죄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수사권 조정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지금의 ‘수직적

지휘관계’를 ‘수평적인 사법통제 모델’로 바꾸고 우리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폭넓게 수행하면서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국민의 인권보호 기능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점을 반성한다”며 “향후 검찰은 직접 수사 기능과 인력을 국민이 공감하는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총장은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며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게 되고 민생범죄는 주민의 ‘민수통제’ 하에 자치경찰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만이 갖고 있는 영장심사 청구권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유지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돼 온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꼭 유지돼야 한다”며 “검사와 사법경찰이 ‘수평적 사법통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검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총장은 최근 제기된 검찰 내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별도로 ‘범죄비리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성민 기자

전 여친 감금·위협 숨지게 한 30대 구속

전 여친친구를 모텔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하다 참문에서 떨어져 사망케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9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이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11시30분께 익산시 송학동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35,여)씨를 협박해 추락시켜 죽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와 이씨는 교제를 하다가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씨는 집을 찾아가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집착했다.

이씨는 “마지막으로 할말이 있다며 A씨를 모텔로 불러냈다.

이씨는 A씨와 모텔로 들어가자마자 소주를 마시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보이며 A씨에게 “헤어질 수 없다”며 협박했다.

A씨는 당일 오후 5시부터 추락 전까지 6시간 가량 모텔에 감금됐다.

경찰은 A씨는 이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탈출방법을 고민하던 중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추락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119구조 신고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모텔을 빠져 나왔다.

A씨가 추락 직전 객실 베란다에 남긴 지문 등 탈출 고민 흔적에 비춰 이씨가 밀어 떨어뜨린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출입문으로 나왔더라면 무사했을 것으로 본다”며 “베란다로 탈출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성민 기자

‘성추행·장학금 갈취’ 교수 항소심서 감형

자신의 여제자를 성추행하고 제자들의 장학금을 갈취한 60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대학교 교수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원심에서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자신의 연구실로 여제자 B(20)씨를 불러낸 뒤 함께 여행을 가자며 이야기를 하던 중 “다리에 살이 찘다”며 B씨의 허벅지를 갑자기 두 손으로 움켜쥐며 “탱탱하네”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결별을 요구하던 내연녀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신행위에 대한 대가를 맞게 해

주겠다”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97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장학금을 받은 제자가 전화를 걸어 고마움을 표시하자 “일래 나에게 200만원을 다 줘야 하는데 150만원만 가져오라”면서 1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A씨는 장학금 300만원을 받게 된 또 다른 제자를 속여 3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현재 A씨는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돈을 편취 및 갈취했고 강제추행까지 했다”며 “또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다수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피해이 가법치 않지만 피고인의 연령과 재판과정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성민 기자

‘전주 원도심 도시재생 꿈꿀 공모사업’ 접수

4월 19일~26일까지

전주시가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오는 4월 26일까지 '2018 전주 원도심 도시재생 꿈꿀 공모사업'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일원 원도심 지역으로 전주 원도심 재생과 공동체 활동에 관심있는 전주 시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나 단체면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채규남 기자

공모사업 대상은 사회·환경, 문화·예술, 교육·복지, 홍보·소통, 도시먹거리, 기타 등 6개 분야 15개 주제다. 접수된 사업 중 10여 팀을 선정, 공동체성과 사업의 공익성, 사업 예상효과 등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공동체 또는 단체는 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관련 서류와 함께 오는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전주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풍남문2길 137)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